



2020년 임협 '기본급 동결·평일OT 2천원 인상' “코로나19 위기서 사회적 책무·고통동참 위해 대승적 양보”

노사는 지난 2월 1일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조합)은 지난해 12월 4일 회사에 임협 개시 요청을 한 이후 두 달 가까이 협상을 벌이다 회사의 기본급 동결 요구를 수용했다. 기본급 동결은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데다 언론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빠진 현실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영언론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고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대승적 양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임협 개시 요청 이후 조합 집행부 협상단은 총 4차례의 공식 실무협상과 10여차례 이상의 비공식 협상을 거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기본급 동결 수용 대신, 평일 OT 기준시급 8천원을 1만원으로 2천원 인상하는 것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닷새 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그 결과 ‘기본급 3% 인상’으로 임협 기본 조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회사는 경영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0.1%의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 설문을 통해 도출된 ‘1% 안팎의 기본급 인상’으로 조건을 양보하면서 재차 협상에 나섰으나, 회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조합 집행부는 회사가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변수 및 각종 불이익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조정·쟁의 수순같은 극한 대립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연합뉴스 노사가 2월 1일 2020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민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장, 오정훈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있는 차선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끝에 노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 잠정 합의안은 1월 28일 화상회의를 통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전체 대의원 47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41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추진됐다.

임협 조인식은 2월 1일 12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과 조합 집행부,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조합 지부장은

“대의원대회 때 조합원들에게 ‘송구하다, 면목없다’ 등의 말씀을 드렸다. 임금을 동결한 집행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라며 “다만 조합원들이 대승적 양보라는 총의를 모아줘 다행이다. 이번에 조합원이 희생한 만큼 2021년 임협에서는 평년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평등위원회 신설…사장추천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지난달 28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대의원 대회에서는 기본급 동결과 평일 OT 기준시급 인상을 골자로 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추진한 외에도 여러 현안이 논의·결정됐다.

이 가운데 하나가 노조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성차별과 편견, 비하 및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를 근절하고 회사 내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인 성평등위는 형식상 노조 위원장 직속이지만, 실제로는 공정보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성평등위원장이 주축이 돼 사실상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

성평등위는 ▲ 성별 임금 차별, 승진 승급 차별 등 사내 성차별 사안에 대한 실태 파악 ▲ 권위적인 조직 문화와 성차별·성희롱 철폐 ▲ 출산·육아 등과 관

련해 모성·부성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이 조화되는 삶 구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연합뉴스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대의원들은 함께 상정된 ‘연합뉴스 사장추천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건’ 역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현 조성부 경영진의 임기가 곧 만료됨에 따라 연합뉴스 최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는 조만간 차기 사장 선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은 진흥회의 사장 추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체로 정치권에서 추천돼 임명된 진흥회 이사들이 여전히 밀실에서 기준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장을 뽑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조합은 공개정책설명회와 시민·사원참여단 구성

등이 도입됐던 2018년 당시보다 좀더 개선을 이뤄내 사장 선출에 시민 및 구성원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3면)

성평등위원회 초대 구성원을 소개합니다

조합은 1월28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성평등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초대 간사로 조미나 조합원(제작시스템부)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노조 전임인 황철환 사무처장과 노조 집행부장인 오예진 홍보부장(언론노조 성평등위원회 위원 겸임)·정빛나 여성부장 그리고 평조합원으로 장세희 조합원(인프라운영부)이 선임됐다.

공정보도 훼손 장본인뿐 아니라 대놓고 정치인도 안된다

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 관련 투쟁 상황 보고 이백만은 저지한 듯...조복래 가능성 여전해 불씨 남아

조합은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관리감독 기관인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6기 이사진에 제대로 된 인사가 오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초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며 투쟁을 벌여왔다. 회사 경영진을 사실상 선출하고 정부 구독료를 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되는 경영평가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연합뉴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합은 연합뉴스 지배구조 특성에 따라 정치권의 입김이 진흥회 이사진 구성에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러한 입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새 진흥회 이사진이 향후 연합뉴스를 불편부당한 공영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지원할 인사들로 꾸려지는 쪽으로 투쟁의 초점을 맞췄다.

조합은 진흥회 이사진 구성의 실무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각 추천기관(정부 2명, 국회의장·여당·야당 각 1명, 신문협회·방송협회 각 1명)에 이사 추천을 위한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성명을 내어 최소한의 이사 자격을 제시했다.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 언론, 특히 뉴스통신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언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 ▲ 언론을 정파적 시각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엄격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춰야 하며, ▲ 특히 공정보도 훼손으로 2012년 103일 간의 파업을 유발한 책임이 있거나 특정 정권 아래서 공영언론이 정파적으로 휘둘리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은 인물』이다.

추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합은 야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명 몫의 추천을 행사하기 위해 공모를 벌였고, 총 5명의 지원자 중에 조복래 전 콘텐츠 담당 상무와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들어선 박노환 경영진 시절 공정보도 훼손과 노조 탄압을 주도한 인물로 다시는 연합뉴스 주변에 와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조합은 판단했다. 이에 대응하고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촉구하는 언론노조

1월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자 조합은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총 4차례의 공문과 1차례의 성명을 내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백만씨가 강기석 현 진흥회 이사장의 후임으로 거론된다는 얘기가 회사 주변에서 파다하게 퍼졌다. 조합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세웠다. 특정 정파의 이념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인이 진흥회 이사장으로 오는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진흥회에 정치인들이 포진해 권력을 잡는 쪽이 공영언론인 연합뉴스 보도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난장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조합의 입장을 담은 공문을 청와대에 2차례 보내고 2차례 성명을 썼다. 이어 1월 28일

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씨를 진흥회 이사로 추천하려던 계획을 접고 다른 인사를 찾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결국 2월 8일로 예정됐던 6기 진흥회 출범은 미뤄진 상황이다.

이처럼 조합이 연합뉴스를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조복래 카드'를 접지 않은 상황이고, 이백만씨 대타로 어떤 인사가 올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다. 조합은 국민의힘이 조복래 전 상무나 이창섭 전 직무대행을 추천할 경우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알릴 방침이다.

●...2020년 '올해의 참글상'에 이세원·장우리·이재림 조합원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는 1월 25일 월례 정기회의를 열어 도쿄 특파원으로 근무 중인 이세원 조합원을 올해의 참글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세원 조합원은 ["한국인은 야생동물...죽어라"...판결로 본 기업 혐한문서] 등 5건의 기사로 일본 대기업 후지주택과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재일한인여성의 법정 투쟁을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장우리 조합원은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등 3건의 기사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을 재확인했고, 장려상을 받은 이재림 조합원은 [학대

누명 쓰고 극단선택한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사건 연속보도]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도록 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공보위와 기자협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연합뉴스 공정보도의 파수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년 맞이 조합원 대상 상품권 지급

설연휴를 앞두고 조합원들께 상품권(신세계·1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본사 각 부서 대의원께서는 가능하실때 본사 13층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취재본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특파원과 해외연수자에게는 10만원짜리를 계좌이체했습니다.

진흥회에 사장추천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정치권이 사장 일방·밀실 결정은 안 될 말 ...시민·구성원 참여 보장돼야"

현 조정부 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되는 가운데 연합뉴스 노동조합(이하 조합)은 대의원의 전폭적 지지 아래 연합뉴스 사장 추천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

친여권 인사들이 연합뉴스 구성원과 시민의 의견과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사장 등 연합뉴스 차기 경영진을 결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장추천제도 개선 추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와 심사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후보들을 평가하는 기존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집행부가 작업 및 논의에 착수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장 뽑는 진흥회 이사 대다수가 여권 인사...독립성 보장 난망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존립 기반으로 삼는 공영언론사인데도, 우리 구성원들은 그동안 "연합뉴스 사장은 전적으로 청와대가 정한다"고 자조해 왔다.

경영진 교체기에는 사장 후보들이 여권 실세를 상대로 낯 뜨거운 충성 경쟁을 펼친다는 소문까지 나돈다.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진흥회가 연합뉴스 구성원과 시민의 견제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기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 탓이다. 정부·여당에 충성을 다짐한 이가 사장이 되면 언론노동자의 최대 근로조건인 공정 보도는 구현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연합뉴스 사장은 진흥회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이 요식행위에 가깝기에 사실상 진흥회로부터 단수 후보로 추천받는 인사가 차기 사장인 셈이다.

그런데 진흥회는 태생부터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설계됐다.

대통령이 진흥회 이사 7명 전원을 임명하는데, 정부 2명, 국회의장 및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각 3명, 신문협회·방송협회 각 1명 등으로 추천권의 무게가 여권으로 기울어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24개 시민사회언론단체가 참가한 '미디어개혁 시민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진흥회 이사 7명 중 최대 6명이 친여권 인사로 채워질 수 있는 구조"라고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대놓고 정치인'인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연합뉴스 구성원의 극렬한 반대에도 최근까지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점은 정파적 편향에 취약한 진흥회의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사추위 구성도 편향 심각... 진흥회가 사실상 80% 지분 행사

이로 인한 문제는 진흥회의 사장 후보 심사 과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진흥회는 새 경영진을 뽑을 시기가 되면 통상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한다. 사추위는 전체 5명 위원 중 3명이 진흥회 이사로 구성된다. 나머지 2

명은 조합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과 진흥회와 조합이 협의한 외부인사 1인이다.

사추위원의 80%(4명)가 진흥회 이사이거나 진흥회 추천 인사인 셈이다. 조합이 추천한 외부인사의 목소리는 묻혀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연합뉴스 안팎에서 사추위 무용론이 제기됐지만, 사추위 구성과 운영의 전권을 지닌 진흥회는 문제 개선에 딱히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온 것이 현실이다.

사추위가 서류심사를 통해 예비후보 3명을 골라내면, 진흥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중 1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한다. 최종 후보 1인은 진흥회 이사들로부터 3분의 2 이상, 즉 5표를 얻은 인물이다.

이런 과정은 전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다가 2018년 5기 진흥회에서야 시민참관단을 구성하고 서류 심사를 거친 예비후보 5명이 공개정책설명회를 벌이는 등 일부 절차가 공개됐다. 하지만 서류심사부터 설명회를 통한 예비후보 3명 선정까지는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시민참관단은 공통질문 3개를 도출하고 설명회장에 참석해 예비후보 5명의 답변을 듣는 외에 뚜렷한 권한을 갖지 못했다.

사장 선출에 '시민·사원' 실질적 참여 보장돼야

조합은 진흥회가 정파적 편향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연합뉴스 차기 사장 선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진흥회의 사추위 내 비중을 현행 80%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시민과 연합뉴스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시민은 연합뉴스 기사의 최종 소비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가기간통신사 경영진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조합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구성원은 보도 중립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올바른 기사를 생산해 공동체 복리에 기여한다는 연합뉴스의 목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시 경영진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사추위에 진흥회와 시민, 연합뉴스 구성원의 3대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둘째, 서류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장 추천 절차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잡음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연합뉴스 경영진은 본연의 능력보다는 청와대에서 결정하는 것'이란 세간의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연합뉴스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조건들을 모은 네거티브 리스트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사추위가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후보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새 진흥회 이사진의 윤곽이 확실히 드러나면 이들과 접촉해 사추위 등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차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흥회 이사회 구성, 즉 연합뉴스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영언론에 걸맞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연합뉴스의 존립 근거를 강화하는 조건이고 이는 곧바로 사원들의 고용 및 노동 조건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은 이를 최대 의무로 인식해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39기 수습사원 대상 노조 교육 소감

조합은 지난 1월 7일 기조실·편집국 수습사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수습사원들은 연합뉴스 노조의 공정보도 투쟁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언론노동자로서 각오와 포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이하는 수습사원들의 소감이다.



김동환(편집국)

사람들은 왜 노조를 미워하는가. 나 역시 그랬다. 노조는 반사회적이라 생각했고, 반조직적이라 생각했다. 2년간의 의정부무는 그 생각을 더 눌러붙게했다. 그것이 외부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아무리 가까이에서 봐어도 어쨌거나 나는 그 바깥에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노조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 노조는 사회적이었고, 노조 구성원들은 누구보다 조직을 아끼고 사랑했다. 건강한 조직을 위해, 심지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합뉴스 노조는 이 순간까지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김지연(편집국)

지금의 연합뉴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쟁이 있었는지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힘써주신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그 가치와 정신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연합뉴스 일원이 되겠습니다.



박규리(편집국)

영상 속 단결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울컥한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컸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언론관을 가진 연합뉴스에서라면 가능하겠단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께서 지켜 오신 공정보도의 가치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일하겠습니다.



이미령(편집국)

“우리 노동조합의 핵심은 ‘공정 보도’다.” 2012년, 선배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지 노조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공영언론의 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부단히 노력해온 선배들 덕분임을 느낍니다. 그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이승연(편집국)

‘공정’은 위태롭다. ‘o’이라는 동그라미 위에 차곡차곡 획을 쌓아 올린 그 형태마저 긴장감을 준다.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반이 굳건해야 한다. 노조 교육을 통해 선배들이 쌓아 올린 공정보도의 역사를 보았다.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다. 이제는 내게도 그 ‘o’를 지탱해야 할 책임이 생겼다. 노조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더 커다란 원을 그린다면 공정은 더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의진(편집국)

노조 역사를 배우며 우리에게 공정보도가 매우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노조가 더 나은 언론, 더 나은 보도를 고민하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또 기쁩니다. 애써주신 선배들께 부끄럽지 않은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정진하겠습니다.



이준용(기획조정부)

일반직이지만 언론사에 입사하면서 저널리즘 전반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됐다. 연합뉴스의 구성원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과거에 있었던 투쟁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언론 자유를 고민하는 노동조합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조다운(편집국)

2012년 파업 영상을 보는 내내 ‘먹물의 책임’이라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투쟁”이라는 외침 뒤엔 멧쩍은 웃음이 뒤따랐고, 팔뚝질은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사장실 앞에 스크럼을 짜고 선 선배들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서 일하는 지식노동자로서 헛글을 쓸 순 없다는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첫 출근날엔 직업을 얻었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선배들이 투쟁해온 역사를 알고 나니까 연합뉴스라는 직장을 얻었다는 사실이 기쁩니다. 연합뉴스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밥값 하는 먹물’이 되겠습니다.



최유진(인사교육부)

장시간 강의에 감사드리며, 노조에 관해 자세히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언론 등을 통해 접했던 것이 전부였는데 구체적으로 노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연합뉴스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권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황윤기(편집국)

공정한 보도 환경이 곧 기자의 근로 조건이다. 묵묵히 지켜온 선배들의 노고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공정보도’를 의무로 삼는 직업인이 됐다는 책임감에 조금은 막막해지기도 했습니다. 공정보도, 정론직필, 불편부당. 우리의 근로 조건을 먼저 내팽개치는 부끄러운 후배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